

기아차 광주공장 '비정규직 해결' 실마리 찾나

노사 첫 특별교섭 추후 일정 논의키로...노조 총파업 철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사협의에 나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 사건 발생 후 노조의 특별교섭 요청을 사측이 받아들여 지난 19일 첫 노사 협의를 벌였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특별교섭에서 별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나 양측 간사는 추후 노사협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뿌리깊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

도 노조원 분신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이날 협회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비정규직들에 기대감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4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생산과정 일부를 떼어 하청을 주고 하청회사에서 직접 비정규직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불법 시비를 비켜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같거나 오히려 힘든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60~70%에 그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규직들이 꺼리는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심지어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기도 하는 등 근무 과정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노사가 신규 채용 때 장기근속 자녀에게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합의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를 이번 광주공장 신규 채용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각계에서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기아차 광주공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번 분신사태를 계기로 기아차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꿰지, 아니면 성과없이 과거를 답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첫 특별교섭은 분위기가 격양된 상태에서 상견례 형식으로 이뤄져 별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의 협상도 사측의 태도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분신 사태와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에 요구한 특별교섭을 사측이 수용, 교섭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19일 강행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번 분신사태를 계기로 기아차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꿰지, 아니면 성과없이 과거를 답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첫 특별교섭은 분위기가 격양된 상태에서 상견례 형식으로 이뤄져 별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의 협상도 사측의 태도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분신 사태와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에 요구한 특별교섭을 사측이 수용, 교섭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19일 강행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간부급 직원 400명 재해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한국농어촌공사가 20일 의왕시 인재개발원에서 경영진 및 본사 부서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등 400여명의 간부급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해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산대저수지 제방붕괴 사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재해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저수지 붕괴원인 분석, 시설물 안전점검체계,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교육과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박재순 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고, 재해대응체계를 재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취득세 면제 4월 1일 기준 소급 적용

양도세 면제 기준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

4·1부동산대책의 핵심 조치인 취득세 면제혜택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정부 발표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안전행정위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는 양도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다루는 상임위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 16일 부동산대책 협의를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결정했지만,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일'에 앞서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서로

적용시점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적용시점을 맞추는 쪽으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안전행정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적용일을 상임위 통과일자로 잡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 4월1일자로 결정할 것"이라며 같은 날짜로 통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는 앞서 여야협약체에서 합의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에버랜드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 밸리'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 밸리'(Lost Valley)를 찾은 시민들이 수륙양용차를 타고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다. 지난 20일 문을 연 로스트 밸리는 에버랜드가 지난 2년 동안 500억원을 들여 준비했으며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았던 전설 속의 동물 낙원을 탐험하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행복기금 사전 신청하면 10% 추가 감면

22일~30일 가접수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경제 안정화의 핵심 공약인 '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정도 추가 감면해준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자동 채무조정 지수가 개발돼 행복기금 신청자에 적용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한 대상자와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자의 우대 수준을 다르게 하겠다는 의미다. 행복기금 직접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40% 선에서 시작한다면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된다. 채무 감면비율이 기존 30~50%보다 높은 60~70%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채무 감면 비율 60% 대상자는 국

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등이다. 70% 감면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중소기업인이다.

행복기금 채무 감면 비율을 처음 개발한 자동 채무조정지수로 결정한다. 일종의 담보인정비율(DTI) 개념이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 4121개 가운데 99%인 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빼곤 모두 해당한다.

/연합뉴스

국세청·관세청 세수확보 총력

세무조사 늘려 탈세 찾기...역외 탈세 적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 당국이 세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추가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중점 추진 과제 중 선정하는 등의 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역외 탈세 등이 핵심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는 등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부당대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으나 초반부터 대기업의 반발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나 중소기업, 서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반발과 여론 추이를 신경 쓰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국세청으로서 부담되는 부분이다. 국세청의 최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세수 실적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역점을 두는 것은 역외탈세 부분이다. 국세청이 이달 들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인과 역외탈세 혐의자,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신호탄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4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6 19 26 41 45	3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335,152,563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89,813,561	26
3 5개 숫자 일치	1,603,814	1,456
4 4개 숫자 일치	50,000	72,242
5 3개 숫자 일치	5,000	1,236,252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시대를 밝혀온 광주일보 61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회갑의 해'를 축하합니다.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회장 정인채 외 회원 일동